

군산항의 새로운 기회로!

전북연구원, 한중카페리 통한 군산항 활성화 방안 제시 물류인프라 조성·한중관광 활성화·지자체간 협력 등

군산항의 물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증편된 한중카페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최근 이슈브리핑 '한중카페리, 군산항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자!'(통권 207호)를 통해 군산항-석도항 간 한중카페리를 활용한 군산항 물동량 증대와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4월부터 주 6회차 운항서비스가 시작된 한중카페리 노선은 2018년 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55%(44,056TEU)를 처리해 군산항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 '신규 화물(신선물류, 전자상거래물류 등)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운항물류를 보다 활성화하려면 '냉동냉장창고 등 콜드

체인체계 구축',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통관장 조성' 등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민간투자 유치, 인·허가 관련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도와 산동성 지방정부, 군산시와 영성시 간 산·학·연·관 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력과 민간 교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산항의 장기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중국 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국제 여객터미널 입국심사 인력·시설 확충',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공식워크숍', '전북도 소재 대학 특성과 프로그램 개발', '전북도내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등 전북도와 군산시가 주도할 수 있는 한중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전북 군산항과 중국 산동성 석도항

을 연결하는 한중카페리 노선은 2018년 1월 한중해운회담 결과에 따라 주 6회차 증편이 확정됐다.

특히 두 척의 선박이 새로 건조돼 2018년 4월, 2019년 7월에 각각 투입돼 소상공인 중심의 상업수요 뿐 아니라 적극적인 여객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중카페리는 대부분 물류 관점에서 물동량 관리를 주로 다루지만, 군산항에서 출발하는 한중카페리의 경우 새로 건조된 선박을 활용한다는 여건을 고려해 기존에 해운물류 담당부서, 관광담당부서 등 관계부서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구를 수행한 나정호 박사는 "한중카페리 주 6회차 운항은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할 경우 인접 항만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운항선사의 경영상 위험이 예상됨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故 권태원 소방경 영결식 제13회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하다 지붕에서 추락해 순직한故 권태원 소방경의 영결식이 최근 부안군 스포츠평크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1계급 특진 추서를 하고 현화하며 고인의 넋을 기리며 위로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두달간 1만1503마리 신규 등록

전북도는 지난 7~8월(2개월)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1만1503마리(7월 3084, 8월 8419)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해 전체 등록된 3126마리의 약 3.6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올해 1~8월까지 등록된 총 마리수는 1만3059마리로 전년 대비 50.2%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물등록은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책임감 없이 무분별하게 사육하다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써 모든 소유자가 참여해야 하는 제도이다.

현행법(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 대상동물은 3개월령 이상의 개로써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이며, 등록의무대상자가 동물을 미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가지 방법(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시·군 및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판매업소 등)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추석 이후에는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사

함에 대하여 민관합동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소중함 반려동물에 기인한 부적합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반려견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길 당부했다.

주로 공원, 유원지, 산책로, 인구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동물 미등록, 목줄과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맹견의 경우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꼭 해야 함을 인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맹견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소유권 취득 후 6개월이내 3시간, 매년 3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며 동물보호법 시행 이전인 3월 21일 이전 소유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3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진성 기자

전북교육청,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지원계획 확정

전북도교육청은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릴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 도내 청소년들을 많이 참여시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계획에 따라 도교육청은 잼버리대

회 지원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교사 6~10명으로 구성되며 잼버리대회 전까지 자문활동, 지원계획 구상, 스카우트 저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스카우트 저변 확대에 집중한다.

청소년단체 사제동행 동아리 50팀을 대상으로 아영활동, 문화체험 등을 지원하고, 스카우트 활동에 관심

이 많은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교사 스카우트 지도자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초·중·고 희망학생 60명을 '잼버리 국가대표'로 뽑아 스카우트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내년 8월 초·중·고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에코 어드벤처를 운영한다.

매듭법과 학교 숲을 활용해 학교에서 즐기는 놀이, 전문가와 함께 학교 숲에서 놀이로 즐기는 과정 활동, 청소년 캠프 등이 펼쳐진다.

/장은성 기자

맞춤형 가족서비스로 도민의 삶의 질 UP

전북도, 가족센터건립사업 공모 선정... 국비 120억원 확보

전북도에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성별·세대간 소통 등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가족센터가 건립된다.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인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도내 8개 시군이 선정되어 국비 1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건립되는 가족센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적 기능의 공간이다.

가족센터 내에는 가족 소통공간, 놀이 소통공간, 다목적 교류공간, 교육·상담, 돌봄공간 등이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지역 마다의 특색을 살려 작은도서관, 행정복지센터, 주민체육센터 등의 복합적 기능이 포함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시군별로 운영 중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도민들이 가족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많고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가족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생활SOC사업 추진 초기에는 가족센터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전라북도도 시군이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전략적으로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균형위와 기재부에도 지역 국회의

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역의 절박함을 전달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7월에 가족센터 건립 사업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추가되었고, 지난 8월초에 균형위와 여성가족부에 2020년 가족센터 사업을 신청해 익산, 정읍, 김제,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8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가족센터는 국비 120억원, 지방비 240억원을 포함해 총 3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2023년에 최종 마무리 될 계획이다.

구형보 도 복지여성보전국장은 "통합가족센터가 설치됨으로써 다기능 복합화로 인한 시너지가 일어나고 이웃공동체 형성과 소통·교류의 허브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타 지역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국 토지소유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으로 한눈에

전북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 큰 호응

전북도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 토지소유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2019년 현재까지 5394명 2만4322필지 2639만㎡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속자 등은

조상 재산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소재의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며,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민원실 및 지적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는 공인인 증서만 있으면 세리얼 부동산정보포털(<http://seeralib.or.kr>)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